文 '전국민 고용보험' 약속… 20대국회 문턱 넘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 "법·제도 정비
고용보험 대상 단계적 넓힐 것"

고용부, 법개정·타부처 협업 진행
與野, 특수형태근로자 적용 입장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국민 취업제도, 고용보험'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은 10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 고용보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10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방침 이행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타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갑 장관은 이를 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회 논의는 한걸음 뒤쳐진 상태다. 여야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두고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예술인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반발로 일단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이날 법안 심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논의끝에 고용보험 확대 대상을 예술인으로 우선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첫 단추는 끼워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지원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정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野, 21대국회 법사위 등 '알짜 상임위' 쟁탈전

이르면 이번주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따라 나눠져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르면 이번 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은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 확보로 꼽힌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정하면 18곳의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협상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알짜' 상임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에 대해 심사한 뒤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주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한다.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는 구조다. 이에 법사위 제2소위의 경우 '법안의 무덤'이라는 별칭도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들 이하 예결위)는 정부 예산·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로 상정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해마다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로 송부하면 예결위가 최종 심사한다. 주요 상임위가 예산·결산을 심사하면 최종 확인은 예결위가 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알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어느 정당이 가질지다. 관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은 '야당' 몫으로 분류된다.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특정 정당의 중요 법안 처리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결위의 예산 심사권 역시 여당의 무분별한 증세나 공약 사업 저지에 활용되기도 했다.

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직을 보유한 것은 이 때문이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당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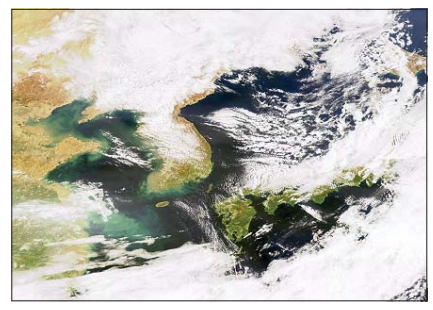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인정하되, 각종 개혁 법안 처리 차원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통합당이 체계·자구 심사로 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각종 개혁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것과 유사한 효과도 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주장에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 체계·자구 수정 권한은 아주 오래전 국회에 법률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나 위헌 소지 여부를 한 번 더 걸러내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2020년 4월 22일 13시 관측 영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리안위성 2B호 지구영상 첫 공개

시설물 현황 등 해양정보 기대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위성) 2B호(3.4톤급)'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천리안위성 2B호 해양 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23일과 4월21~22일 두 차례 실시됐는데,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을 매우 선명하게 담아내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더 명확하게 촬영된 것이 보이고,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촬영돼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

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 해상도가 500m에서 250m로 4배 개선돼 더욱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 유출 발생 등 해양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 탑재체는 오는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하기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원은미 수습기자

과기정통부, 초기창업자 보육·성장 돕는다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6곳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0년도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6개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특화 액셀러레이터의 신청을 지난 3월27일까지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코맥스벤처러스·블록크래프터스·어썸벤처스·요즈마그룹코리아·인포뱅크·케이액셀러레이터 등 6개를 최종 선정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를 발굴해 일정 기간 동안 집중 보육해 성장을 돕는 기관을 말한다.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은 ICT 분야 혁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ICT 분야 특화 액셀러레이터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개 액셀러레이터 당 3억원 내외의 정부 지원금과 1억원 이상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는 사업비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파트너 확보,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선정된 6개 액셀러레이터는 미국, 독일, 중국, 이스라엘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액셀러레이터별 특화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